

금융시장 불안과 정책과제

I. 금융불안의 현황

-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금융불안
-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문제 해결
- 금융시스템 위기로의 확대 가능성

II. 금융부실과 금융불안

- 감소폭이 둔화된 금융권 전체의 부실규모
- 은행권 부실규모
- 비은행권 부실규모
- 서민금융기관의 부실규모
- 기타 비은행권 부실규모
- 일부 금융권의 연체율
-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 은행권의 금융채 문제
- 투신사의 잠재부실
- 은행 특정금전신탁의 보유 카드채문제
- 카드사의 불안한 자본건전성
- 추가적 부실 가능성
- 국고채로의 지나친 자금이동

III. 정책 제언

- 거시정책을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시중부동자금의 장기채권상품으로의 유인책
- 적극적인 카드사의 구조조정
- 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가급적 자제
-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다각도의 대책 마련

<부록> 1999년 8월 대우사태 당시 금융권의 부담 문제

1. 금융불안의 현황

□ 금융시장의 취약성과 금융불안

- 외환위기 이후 GDP의 3/1에 달하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시장은 끊임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외형적으로는 은행 수가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으며 금융회사 종사자 중 3명중 한 명은 정든 직장을 떠나는 대대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이루어졌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금융시장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공적자금 투입과정에 불가피하였다고는 하나 관치금융이 오히려 확대된 결과를 초래했다는 혹평이 가능함.
 - 특히 대우사태 이후에는 금융시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왔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안정대책에 의해 연명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참여정부 들어서도 금융시장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운데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발표로 촉발된 투신사 MMF 등에 대한 환매요청이 카드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확대되면서 금융불안이 더욱 확산되었음.
 - 이는 개인부문의 금융부채/금융자산 비율과 카드사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내채위기론이 제기되었던 지난해의 우려감이 예기치 않았던 SK글로벌의 분식회계 발표이후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일부 현실화된 것임.
- 금융권 전체 부실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최근 감소율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음.

- 특히 부실비율이 일부 금융권의 경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며 우리나라 금융권간 자금조달과 운용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금융권의 부실이 다른 금융권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큼.

□ 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의한 문제 해결

- 정부는 3.17 '신용카드사 종합대책'과 4.3 '금융시장 안정대책'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어놓았으며 주요 정책 내용은 카드사의 단기유동성 확보임.

- 이로 인해 회사채발행이 일시적으로 4월의 경우 전월대비 21.9%나 증가하였고 카드채도 6,571억원 발행되었으나 카드사의 단기자금사정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다시 6월 금융위기설이 제기되었음.

※카드사들이 5월말현재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으로 확보가 예정된 자금은 총 5조 5,500억원에 불과한 반면 회사채 자산담보부증권(ABS), 기업어음(CP) 등을 포함한 카드채 만기도래 규모는 3/4분기 16조원, 4/4분기 8조원 등 총 24조원에 달함. 따라서 하반기 적어도 10조원 이상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됨.

- 이에 따라 5월 3일 다시 카드사 관련 보완대책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며 단기적이면 땀질식 방안에 불과하다보니 4·3대책의 효력이 끝나는 7월에 카드대란설이 다시 대두되고 있음.
- 지난 4월4일 금감원이 내놓은 시나리오별 카드사 손실흡수능력(5.1조원 기적립충당금, 5조원 자기자본, 4.6조원 자본확충) 자료에 따르면 연체율에 따라 1개월 미만(3%), 1~3개월(57%), 3개월 이상(90%), 대환대출(30%)로 예상손실률을 책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험적 손실률로서 현재와 같이 급격히 미래손실이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의미가 없음.

-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5·23부동산대책이 지나치게 시장을 압박하여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게 되는 경우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세계강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나 위기설과 대란설에 몰려 정부가 내어놓은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관치주도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함.
- 결국 시장원리가 강조되지 않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효력이 떨어지면 주기적으로 금융 불안에 시달리는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음.

□ 금융시스템 위기로의 확대 가능성

– 정부의 강력한 시장안정대책으로 투신권의 환매사태는 진정되었으나 추가적인 금융시장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금융불안이 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 상존

- 채권유통시장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한 무보증 회사채의 일평균 거래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채권유통시장 거래규모의 3%에 불과하여 회사채 시장은 거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
- 이에 따라 채권시장이 왜곡되어 장단기 금리 수준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6월7일 현재 3년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일 사상 최저치 행진을 거듭하여 콜금리(연 4.0%)와의 격차가 겨우 0.07%포인트 차이로 줄어들었으며 91일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CD)나 1년 짜리 통화안정증권(통안채)의 수익률이 3년 짜리 국고채 수익률보다 오히려 최고 0.23%포인트 높아져 장·단기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표 1> 주요금리 추이

(단위: 연%, %p)

	2001말	2002말	2003년							
			1말	2말	3.13	3말	4말	5.12	5말	6.16
국고채(3년)	5.91	5.11	4.77	4.60	5.24	4.62	4.46	4.39	4.10	3.95
회사채(3년, AA-)	7.04	5.68	5.29	5.14	5.89	5.38	5.32	5.31	5.21	5.19
CD(91일)	4.86	4.90	4.55	4.53	5.04	4.70	4.54	4.49	4.30	4.26

– 지나친 국고채 유통수익률의 하락은 금융시장의 추가적인 불안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

-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자금이 국고채에 지나치게 몰려있어서 국고채 금리의 작은 충격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할 가능성
 - 국고채 금리가 반등하게 되면 그 동안 국고채 시장에 몰려 있던 자금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국고채 금리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급상승해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되고 있으며 강대국들은 앞 다투어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환율정책을 사용하려 하고 있으며 세계적 금융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
-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 금융시장 역시 불안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됨.
 -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내경기는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고 취약한 금융시장 구조가 노출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위험기피성은 더욱 커지고 이는 실물부분으로의 투자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II. 금융부실과 금융불안

□ 감소폭이 둔화된 금융권 전체의 부실규모

- 금융시장이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배경에는 공적자금의 투입 이후에도 남아있는 금융권의 부실채권 때문임.
- 금감원의 공식통계에 의한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 여신규모는 지난 2년간 가장 높았던 2001년 3월의 38조원에서 2002년 말 현재 31.8조원으로 감

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즉 2002년 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총여신 817.8조원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3.9%로 2001년 3월의 5.1%에 비해 숫자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2001년 말 이후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꾸준히 30조원을 상회하고 있음.

－ 1998년 이후 2001년까지 부실채권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공적자금 투입의 결과이며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마무리된 2002년부터는 부실채권규모가 축소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

- 2002년 하반기 이후 금융권 전체의 부실규모는 절대적 금액기준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음.

－ 금감원의 공식통계에 의한 2002년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실비율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금융권별로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경우도 있음.

- 은행권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일부 제2금융권은 부실채권비율이 아직도 두 자리 수대임.

<표 2> 금융회사¹⁾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2000.12말	2001.12말	2002.3말	2002.6말	2002.9말	2002.12말
고정이하여신 (A)	64.6	35.1	38.0	32.1	34.7	31.8
총 여 신 (B)	621.4	644.4	744.1	772.8	811.8	817.8
고정이하여신비율(A/B)	10.4	5.4	5.1	4.2	4.3	3.9
순고정이하여신 (C)	31.6	15.3	15.4	13.1	14.8	15.8
비율(C/B)	5.4	2.5	2.2	1.8	1.9	2.0
무수익여신 (D)	50.2	31.3	34.1	29.1	31.3	28.7
비율(D/B)	8.1	4.9	4.6	3.8	3.9	3.5

주: 1) 은행(특수은행 포함), 비은행(상호저축은행, 증금, 신탁,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보험(생보, 손보), 증권·투신사 기준임.

2) (고정이하여신-대손충당금)/(총여신-대손충당금), 이하 같음.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은행권 부실규모

－ 은행권의 경우 2002년 말 총여신 648.2조원 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3%로 비교적 다른 금융권에 비해 양호한 모습

- 그러나 추세를 보면 2002년 들어 상반기에는 부실여신규모가 줄어들었으나 하반기에는 부실규모가 증가추세로 반전되었음.
- 또한 여타 금융권의 부실문제, 예를 들어 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의 부실 확대 등에서 은행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권의 부실규모를 공식적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표 3> 은행권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2000.12말	2001.12말	2002.3말	2002.6말	2002.9말	2002.12말
고정이하여신 (A)	42.1	18.8	18.1	14.2	15.0	15.1
총 여신 (B)	526.1	551.2	580.9	603.2	634.4	648.2
고정이하여신비율(A/B)	8.0	3.4	3.1	2.4	2.4	2.3
순고정이하여신 (C)	20.7	9.6	8.7	7.3	7.8	8.0
비율 ²⁾ (C/B)	4.1	1.8	1.5	1.2	1.3	1.3
무수익여신 (D)	29.5	15.5	14.8	11.5	12.0	12.1
비율 (D/B)	5.6	2.8	2.5	1.9	1.9	1.9

□ 비은행권 부실규모

－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 종금, 신탁, 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의 경우 여신규모가 2000년 말에 비해 159.9% 증가하였음(같은 기간 은행의 여신규모는 23% 증가).

-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리수대를 보이고 있으며 총당금을 뺀 순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작년 하반기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

<표 4> 비은행권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2000.12말	2001.12말	2002.3말	2002.6말	2002.9말	2002.12말
고정이하여신 (A)	14.7	13.2	13.0	11.8	14.1	12.0
총 여신 (B)	43.2	94.6	105.1	113.3	119.8	112.1
고정이하여신비율(A/B)	34.0	14.0	12.4	10.4	11.8	10.7
순고정이하여신(C)	8.0	4.2	4.3	3.8	5.1	6.2
비율 (C/B)	21.9	5.0	4.6	3.7	4.7	6.1

□ 서민금융기관의 부실규모

-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신용협동조합과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여신비율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2002년 12월말 현재 신탁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총여신대비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각각 7.9%, 14.8%를 기록하고 있음.
 - 신탁의 경우는 2002년 중 외형상으로는 부실구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공적 자금투입과 더불어 부실 신탁이 정리된 결과임.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집계 결과에 의하면 금년 들어 2월말 현재 전국 115개 저축은행의 총여신 19조 5,749억원 가운데 1개월 이상 연체금액은 4조 2,869억원으로 21.9%임.
 - 이 같은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및 12월의 18.1%, 19.3%보다 높아진 수준임.
 - 특히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의 연체율은 2002년 12월말 16.8%에서 2003년 2월말에는 34.9%로 급증

<표 5> 서민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2001.12말	2002.12말	2001.12말	2002.12말
고정이하여신 (A)	1.2	0.8	3.1	2.9
총 여 신 (B)	10.7	10.1	15.9	19.6
고정이하여신비율(A/B)	11.2	7.9	19.5	14.8
순고정이하여신 (C)	0.5	0.3	1.7	1.7
비율 (C/B)	5.0	3.1	11.7	9.3

□ 기타 비은행권 부실규모

- 기타 카드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 금융회사, 보험사 및 증권·투신사의 경우도 총여신규모에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실규모는 심각한 상태임.

- 특히 할부금융사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02년 말 현재 12.2% 수준이며 증권투신사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38.2%나 됨.
- 카드사의 경우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2002년 12월말 현재 4.0% 수준이나 이는 2001년 말에 비해 3배나 되는 수치임.

<표 6> 기타 비은행기관의 여신건전성 현황

(단위: 조원, %, %p)

구 분	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보험		증권·투신	
	2001.12말	2002.12말	2001.12말	2002.12말	2001.12말	2002.12말	2001.12말	2002.12말	2001.12말	2002.12말
고정이하여신 (A)	0.5	2.1	3.4	2.3	0.1	0.05	2.5	2.1	4.6	2.6
총 여 신 (B)	39.4	53.1	15.5	18.9	0.6	0.8	45.2	50.7	8.9	6.8
고정이하여신비율(A/B)	1.3	4.0	21.9	12.2	16.7	6.3	5.5	4.1	51.7	38.2
순고정이하여신(C)	0.1	0.8	0.3	1.7	0.01	0.03	1.3	0.9	1.7	0.7
비율 (C/B)	0.3	1.6	2.4	9.4	1.9	3.9	3.0	1.8	28.3	14.3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일부 금융권의 연체율

—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실채권 비율 외에 금융불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가 연체율임.

- 대표적인 예가 신용카드사이며 3월 신용카드 연체율은 9.6%로 2월의 10.4%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나 다시 4월에는 증가세로 반전
- 각종 정부의 카드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감소추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
- 이러한 높은 연체율도 카드사들이 대환대출 등을 통해 잠재된 부실이 나타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

<표 7> 신용카드채권 연체율 비교

	01.12말	02.6말	02.9말	02.12말	03.1말	03.2말	03.3말	03.4말
전업카드사	5.8%	7.9%	9.2%	6.6%	8.4%	10.4%	9.6%	10.9%

주: 1개월 이상 연체비율 기준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 생명보험회사들도 보험약관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하면서 2002년 12월말 현재 19개 생보사의 대출 평균 연체율(1일기준)이 11.0%에 달하고 있음.

- 약관대출의 경우 보험료를 담보로 하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만 이 역시 연체율이 9.9%임.
- 일부 생보사의 경우는 연체액이 순익을 넘어서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22개 할부금융회사의 연체액(1일 이상 연체 기준)은 2조 5,021억원으로 연체율이 13.1%임.

□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악화

- 대부분의 은행계 신용카드사들의 경우 2002년 4/4분기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사 전체의 2002년 말 당기순손실이 2,616억 원을 기록

<표 8> 신용카드회사 현황(2002. 12월 현재)

(단위: 억원, %, 천매)

구분	비씨	국민	엘지	삼성	외환	현대	롯데	우리	신한	계
총 자산	6,852	133,000	194,257	186,742	53,623	31,217	3,755	47,292	24,737	681,476
자기 자본	1,509	9,182	17,747	17,938	5,757	1,918	889	3,330	2,475	60,745
당기순이익	253	△2,609	3,504	5,536	△524	△1,451	△845	△6,485	5	△2,616
카드채권(말잔)	700	92,395	109,030	142,164	45,025	26,978	2,885	28,352	25,350	472,879
총카드이용실적	1,519,425	1,053,134	1,556,729	1,487,151	491,164	121,628	19,239	333,522	116,360	6,698,352
카드발급수	23,037	17,505	22,657	20,093	9,575	3,164	378	5,843	2,548	104,800
개인	22,164	17,120	22,504	19,874	9,352	3,142	347	5,628	2,463	102,593
법인	873	385	153	219	223	22	31	215	85	2,207
가맹점수	1,966	1,670	2,724	1,772	2,450	1,865	1,348	273	1,545	15,612

주: 총카드이용실적, 카드발급수, 가맹점수는 경영은행의 카드실적을 포함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FY2002 신용카드사 영업실적, 2003년 2월24일 보도자료

- 금년 들어 1/4분기 중 전업카드사는 1조 3,09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
 - 충당금적립비율도 전년동기대비 절반수준으로 하락
 - 카드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맞추기 발행한 후순위채는 연 10%에 가까운 고금리여서 장기적으로 카드사 경영수지에 부담이 될 수 있음.

<표 9> 신용카드회사의 1/4분기중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p)

구 분	2002.1~3월	2003.1~3월	전년동기 대비 증감
당기순이익	6,596	△13,099	△19,695
총당금적립전	13,215	16,494	3,279
총당금적립잔액(주)	18,651	56,102	37,451
총당금적립비율(주)	328.7	160.3	△168.4

주: 월말잔액임

자료: 금융감독원

- 카드사별로 자본확충계획을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 4조 5,500억원의 증자가 계획된 대로 완료된다고 해도 늘어나는 부실과 강화된 영업규제를 감안하면 카드사의 경영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표 10> 카드사별 자본확충 추진 계획

(단위: 천억원)

	엘지	삼성	국민	외환	우리	현대	롯데	신한	계
실행완료					2 (증) (3.27)	1.8(증) (3.28)			3.8(증)
상반기 예정	5 (증)	2 (증) 3 (후)	5 (증) 0.5(후)	1.2(증)		1.8(증)		1 (후)	15(증) 4.5(후)
이사회 결의	4.22	4.11		4.28					
신주배정 기준일	5.16	4.28		5.20					
주금납입	6.30	5.29 (후:6.17)	6월중 ²⁾ (후:6월)	6.30		6.10		4.25	
하반기 예정	5 (증·후)	5 (증·후)	5 (증)	1.2 (증)	2 (증) 3/4분기	1 (후)	2 (증) 9월 중	1 (후) 9.25	22.2 (증·후)
계	10	10	10.5	2.4	4	4.6	2	2	45.5

주: 1) 증-유상증자, 후-후순위채

2) UBS 컨설팅 결과(4.30 예정)를 반영하여 증자여부 확정 예정

- 카드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유통금리는 삼성 등 우량채권이 평균 6%대, 비우량채는 8~9%수준으로 회사채 평균유통금리 4.3%에 비해 1.5~2배나 높지만 수요가 없어 발행물량도 급격히 감소, 카드사의 경영을 이중으로 압박하고 있음.

<표 11> 발행주체별 금융채 발행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2002년 1~4월		2003년 1~4월		전년 동 기대비	2003년 3월		2003년 4월		전월 대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신용카드사	178,804	72.6	71,950	76.1	32,671	60.3	△54.6	2,450	47.1	6,571	70.3	168.2
할부금융사	61,100	24.8	22,600	23.9	18,225	33.7	△19.4	2,510	48.3	2,770	29.7	10.4
증권회사	6,200	2.5	-	-	3,240	6.0	N/A	240	4.6	-	-	△100.0
기 타	200	0.1	-	-	-	-	-	-	-	-	-	N/A
합 계	246,304	100.0	94,550	100.0	54,136	100.0	△42.7	5,200	100.0	9,341	100.0	79.6

자료: 금융감독원, '2003년 1~4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2003년 5월9일

□ 은행권의 금융채 문제

－ 카드회사의 카드채 발행에 따르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와 더불어 은행권의 금융채 문제도 금융시장 불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대두

- 2003년 3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금융채발행 잔액은 107조 4,000억 원으로 은행계정 총자산에서 11.6%를 차지하고 있음.
- 금융채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으나 예금의 경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부담과 더불어 일반적인 관리 비용을 감안하며 조달원가가 금융채가 더 싼 편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금융채 발행을 늘려왔음.

<표 12> 은행의 금융채 발행·상환 현황

(단위: 조원)

	2002말 (A)	2003.1월			2003.2월			2003.3월			증 감 (B-A)
		발행	상환	말잔	발행	상환	말잔	발행	상환	말잔(B)	
원 화 채 권 (후순위채)	81.5 (16.9)	6.1 (-)	3.0 (0.1)	84.6 (16.7)	4.7 (0.2)	2.5 (0.1)	86.8 (16.9)	2.1 (0.6)	2.2 (-)	86.7 (17.4)	5.2 (0.5)
외 화 채 권 (후순위채)	18.3 (3.1)	1.2 (-)	- (-)	19.21 (3.0)	- (-)	- (-)	19.41 (3.0)	0.6 (0.5)	0.1 (-)	20.71 (3.7)	2.4 (0.6)
합 계(A) (후순위채)	99.8 (20.0)	7.4 (-)	3.0 (0.1)	103.81 (19.7)	4.7 (0.2)	2.5 (0.1)	106.21 (19.9)	2.7 (1.0)	2.3 (-)	107.41 (21.1)	7.6 (1.1)
총 자 산 (B)	910	-	-	904	-	-	919	-	-
비중(A/B, %)	11.0	-	-	11.5	-	-	11.6	-	-

자료: 한국은행

- 문제는 금융채의 만기구조로 금년 3월말 현재 후순위채는 평균만기가 4.7년이나 일반금융채는 1.4년에 불과함.

- 특히 최근 들어 금융채의 만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채는 51.9조원으로 전체 발행잔액의 48.3%임.

<표 13> 금융채 잔존만기 현황(2003.3월말 현재)

(단위: 조원)

	~3mo	~6mo	~1yr	~2yr	~3yr	~5yr	~7yr	7yr~	평균만기(년)
일 반 채	12.9	10.2	27.6	14.1	10.8	8.4	0.5	0.9	1.4
후순위채	0.3	0.2	0.7	1.0	2.9	7.8	4.4	3.7	4.7
전 체	13.2	10.4	28.3	15.1	13.7	16.2	4.9	5.6	2.1

자료: 한국은행

- 금융시장 불안감이 고조되어 카드채와 금융채 만기가 일시에 집중될 경우 일부 은행의 유동성문제로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특히 금년 1/4분기 중 발행한 은행권 금융채의 83.5%가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성 채권으로 금년내에 만기가 돌아오게 됨.

<표 14> 신규발행 금융채 만기구조(2003.1/4분기 기준)

(단위: %)

	1년 미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6년 초과	합계
일 반 채	0.7	82.8	0.9	9.1	-	3.6	1.2	1.7	100.0
후순위채	-	-	-	-	-	12.2 ¹⁾	33.5	54.3	100.0

주: 1) 5년 초과 6년 미만

자료: 한국은행

- 2003년 들어서는 경기가 예상외로 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SK분식회계와 같은 예상외의 사건으로 은행권들의 영업실적이나 건전성지표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2003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22억원에서 89% 급감한 739억원(총당금적립전 이익은 8,275억원)에 그치고 있음.
- BIS자기자본비율도 금감원이 권고기준인 10%를 하회하는 9.86%로 하락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투신사의 잠재부실

- 정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투신권의 잠재부실 요인으로 꼽히는 10개 투신사의 채권담보부증권(CBO) 후순위채권 보유고는 2003년 2월말 현재 6조 2,001억원임.

- CBO 후순위채이 지난 2000년 중 연 8~9%대의 금리, 만기 5~7년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저금리수준이 이어질 경우 이를 보유한 투신권은 역마진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투자신탁과 한국투자신탁도 각각 1.8조원, 1.3조원의 CBO 후순위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공적자금 회수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

□ 은행 특정금전신탁의 보유 카드채문제

- 7월 카드사대란설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은행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카드채가 7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는 사실임.

- 현재 은행권의 특정금전신탁에 포함된 카드채와 카드사 CP는 전체수탁고의 30~50%에 이르는 9조~15조원대로 추산됨.
- 1인당 평균 신탁자산을 1억원정도로 가정할 때 대략 9~15만명의 고객들이 카드채가 편입된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상황
- 정부의 카드사 지원책이 종료되는 오는 6월말 이후에도 카드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 카드사문제로 인한 금융불안이 지속될 경우 신탁자금의 대거 이탈과 환매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카드사들의 카드채 상환 능력이 떨어져 강제적으로 만기연장에 들어간 금전신탁에서 고객들이 이탈하게 되면 카드사 유동성은 물론 은행경영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SK글로벌 기업어음(CP)에 대규모 투자했던 일부 은행들은 고객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은행경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음.

- 특정금전신탁 문제가 가시화되기 전에 카드사 관련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금융권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카드사의 불안한 자본건전성

- 카드사의 자본건전성도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면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크게 떨어져서 위험수준에 접근한 상태임.

- 지난 3월 말 현재 9개 전업 카드사들의 평균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0.2%로 지난해 말의 12.5%에 비해 2.3%포인트 하락하였음.
- 9개 카드사 중 BC와 현대 등 2개사만 조정자기자본비율이 올랐고 나머지 7개사는 모두 떨어졌으며 일부 회사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8%대를 겨우 넘기고 있음.

- 오는 6월부터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8%로 강화되면 일부 카드사들은 대규모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임.

<표 15> 카드사별 조정자기자본비율(2003.1/4분기 말 기준)

(단위: %)

비씨	국민	엘지	삼성	외환	현대	롯데	우리	신한	합계
29.6	8.1	11.0	10.1	11.6	8.2	21.0	9.2	9.8	10.2

□ 추가적 부실 가능성

- 금년 3월말 현재 9개 전업카드사와 16개 은행겸영 카드의 전체 연체금액(이하 1개월 이상)은 11조 3,000억원에 달해 작년 말 8조 3,000억원보다 3조원(36.1%) 늘어났음.
 - 이러한 연체율 급증세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현금서비스한도 축소에 기인한 바 크며 이러한 추세는 금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이미 상당수준의 금융부실이 존재하고 금융시장 전체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카드사 등 추가적인 금융권의 부실요인이 발생하면 공적자금이 다시 투입되지 않는 한 이를 감당하게 어려울 것임.
 - 특히 최근의 경우처럼 SK 사태 등 추가 부실요인이 발생한다면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카드사들이 다시 심각한 유동성 압박을 받게 되면 증자에 참여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은행 등 대주주의 동반부실도 있을 수 있음.

□ 국고채로의 지나친 자금이동

- 한은의 5월의 콜금리 인하이후 경기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짐에 따라 안전자산인 국고채로의 자금이동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함에 따라 콜금리 추가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고채유통수익률이 기형적으로 하락하여 CD 금리와 통안채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이는 경제에 소폭의 금리인상과 같은 작은 충격에도 국고채를 대량 매도하여 대규모 환매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일어나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III. 정책제안

□ 거시정책을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

- 최근의 카드사 문제에서 비롯된 금융시장 불안은 단지 카드사만의 문제는 아니며 저금리정책, 소비위주의 경기부양책 등 거시금융정책의 결과와 취약한 금융시장구조의 복합적 산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거시금융 대책이 필요함.

- 1998년 8월 대우사태* 이후 정부는 십수차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일부 잠재부실이 남아있는 상황이며 부실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대우그룹의 국내 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금은 64.5조원, 해외차입금은 99억달러였음.

- 투신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장시스템에 의한 과감한 인수 및 합병을 통한 민영화 또는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시장참여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함. 특히, 추

가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불식되어야 함.

- SK글로벌 사태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에 달려있긴 하나 대기업 부실이 이어질 경우 현재의 금융시장은 주기적으로 위기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근본적으로는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투자여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저금리구조의 경제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체적인 차원의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번에 정부의 신용카드사 및 투신사 유동성 정상화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며 설사 시스템위기를 막기 위해 5조원을 사용했다고 해도 시장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보다 바람직하게 사용했어야 했음(예를 들어 카드채의 무차별 만기연장보다 경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민간 투자유입을 유도하는 것도 방법).

□ 시중부동자금의 장기채권상품으로의 유인책

- 결국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근본적으로 저금리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면 보다 강력한 시중부동자금의 장기투자자금으로의 유인정책이 있어야 할 것임.

-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중부동자금을 신탁상품이나 장기성 채권상품으로 유도하여 채권매수나 주식매수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
- 이를 위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상품에 대해서는 무기명채권상품의 허용이나 비과세 확대 등 한시적으로나마 강력한 세제상 및 기타 유인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카드사의 구조조정

- 금융시장 불안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경기의 조기회복이며 경기회복이 예상외로 늦어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의 구조조정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복이 어려운 부실카드사의 과감한 퇴출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카드사의 부실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
 - 은행계 카드사의 부실은 직접적으로 은행이 부담하게 될 것이며 부실 전업카드사가 발행한 카드채를 보유했다면 이 또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 시장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가급적 자제

- 금융기관이 가계대출 운용에 있어 신용위험 관리기법의 고도화 및 신용에 따른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제고에 노력할 수 있는 시장친화적 감독 정책 마련
 - 감독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나 연체율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보다 개별 금융회사가 걱정된 방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지 만을 감독해야 할 것임.
 - 이러한 감독정책은 금융권별로 업무성격에 따라 차별화해야 할 것임.
- 지난 하반기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및 카드사 관련 정책 중 건전성 감독과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 외에 현금대출위주의 영업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비중을 전체 채권액의 50%로 제한

- 이는 경기 불황과 함께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연체율 급증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현재 9개 카드전업사의 총자본액은 6조 745억원인데 반해 카드사의 2003년 3월말 현재 자금차입 규모는 카드채 28조 9,000억원,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채권매각 33조 6,000억원, 기업어음(CP) 20조 2,000억원 등 총 86조 7,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약 14배임.
- 최근 들어서는 정부가 카드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회사채 발행 규모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허용하고 있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관련 규정(48조)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
 -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발행 한도가 자기자본의 4배
 - **혹은 한도제한 대상에 카드채 외에 카드업계의 신종차입수단인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기업어음(CP) 등을 포함
- 이는 현금부대비율 규제가 카드사들의 급격한 현금서비스 한도축소와 신용대란으로 이어진 것처럼 카드사의 차입제한 역시 시장에 직접 충격을 가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

□ 가계부채에 대한 지속적인 다각도의 대책 마련

- 최근 금융불안의 주요 원인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는 금년들어 1/4분기에는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나 경상 GDP대비 잔액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므로 다각도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가계신용잔액을 경상GDP와 개인부문 NDI(Net Disposable Income, 순처분가능소득) 등의 소득수준과 대비해 보면 2001년 말(각각 61.9%, 97.0%)보다 크게 상승한 73.6% 및 115.3%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 현 상태에서 급격한 거시경제정책의 선회는 가급적 피해가며 투자여건 개

선을 위한 경기회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개선될 때까지 정책금리 목표수준을 바꾸지 말고 유동성을 점진적으로 흡수해나가는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처럼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을 시장에 주는 정책신호는 금융불안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은행과 정부간의 정책공조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표 16> 국내총생산 및 가계소득 대비 가계금융부채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구분	한국			한국	미국	일본
	2000	2001	2002	2002	2002	2002
가계신용잔액/경상GDP	51.1	61.9	73.6	(84.1) ²⁾	(83.9) ²⁾	(81.1) ²⁾
가계신용잔액/개인NDI ¹⁾	79.0	97.0	115.3	(131.7) ²⁾	(112.1) ²⁾	(136.4) ²⁾

주: 1) 2002년 한국 및 일본의 개인NDI는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2) ()내는 자금순환표상의 개인 금융부채/경상GDP 또는 개인NDI로 개인은 순수가
계이외에 소규모 개인기업 및 민간비영리단체도 포괄

자료: 한국은행, 각국의 자금순환 및 국민계정

-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불량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이 아직도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자발적인 대출상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환대출은 장기 분할식으로 전환하되 지나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대책은 지속되어야 함.

*신용카드 연체율과 개인신용불량자수는 2/4분기 들어 증가추세로 반전되었고 당분간 증가추세를 보일 것이 예상되므로 꾸준한 대비책이 필요함.

- 더불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 가계대출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의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표 17> 신용카드 연체율 및 개인신용불량자수 추이

(단위: 기말기준, %, 만명)

	2001년	2002년				2003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신용카드 연체율 ¹⁾	2.5	2.9	3.8	5.1	6.6	8.4	10.4	9.6	10.9
개인신용불량자수	245.0	245.5	226.0	245.5	263.6	274.2	283.8	295.7	308.6

주: 1) 전업사의 30일 이상 관리자산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신용불량자의 추가발생 예방을 위한 가계대출관련 소비자 상담제도나 개인의 부채관리전략과 같은 소비자 재무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함.

- 가계대출관련 거래 약관에 대한 정보 확대, 신용카드 사용관련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의 재무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릴 필요
- 신용불량자 등록에 따르는 사회적 패널티에 대해 특히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록> 1999년 8월 대우사태 당시 금융권의 부담 문제

1. 대우그룹의 국내차입금

– 1999년 8월 대우사태 직후 대우그룹의 총 국내 차입금은 64조 6,508억 원임.

- 금융기관 여신은 은행권이 19조 6,627억원 제2금융권이 16조 4,334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총 36조 961억원이며
- 금융기관들의 CP 및 회사채 보유액은 각각 8조 6,095억원, 19조 9,452억원 임.

<대우의 국내 차입금 현황>

구분	여신	회사채	CP	국내차입금총계
금액	36,0961	199,452	86,095	646,508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2. 대우그룹의 해외차입금

– 대우그룹의 외화차입금은 1999년 8월 현재 총 99억 4,000만달러로 이 중 1999년 하반기 만기도래액은 54억 8,000만달러임.

<대우그룹 외화차입금 현황>

(단위: 억달러)

현지법인 차입금	국내금융기관 현지법인 차입금		15.7
	전환사채등 시장물		6.9
	외국계 금융기관	중장기 차입	18.7
		단기 차입(운용자금등)	27.1
	합계		68.4
본사 외화차입금	31		

자료: 금융감독원

<대우그룹 외화차입금 만기구조>

(단위: 억달러)

구 분	1999년	2000년 이후	계
국내본사 해외지사	7.4	23.6	31.0
현 지 법 인	47.4	21.0	68.4
합 계	54.8	44.6	99.4

자료: 금융감독원

3. 국내 금융기관별 대우그룹 채권 보유 규모

- 대우그룹 여신은 은행권이 가장 많으며 제2금융권 중에서는 보험사가 가장 많음.

<금융기관별 대우그룹 여신 현황>

(단위: 억원)

은 행	여신금액	제2금융권	여신금액
산 업	39,963	보험사	대출 : 11,197
외 환	25,867		지급보증 : 116,516
한 빛	24,182	증권사	대출 : 26,944
수출입	23,250		지급보증 : 6,435
제 일	20,547	리스사 및 기타	대출+지급보증
조 흥	17,803		3,242
한 미	7,932	제2금융권 합계	164,334
서 올	4,942	전 체 합 계	360,961
하 나	4,896		
국 민	4,748		
기 업	2,932		
주 택	2,430		
외 국은	7,455		
기 타	9,680		
은행합계	196,627		

주: 1) 5월말 은행연합회 CRT자료 기준
 2) 대출, 지급보증, 외화여신 합계

- 회사채 및 CP는 투신권이 1999년 6월말 현재 총 발행액의 76.9%를

보유

<금융기관별 대우 CP 및 회사채 보유 현황>

(단위: 억원, %)

	보유잔액			총금액 중 보유비중
	CP	회사채	합계	
총 계	86,095	199,511	285,606	100
은 행	32,921	27,795	60,775	21.2
총 금 사	1,995	-	1,995	0.7
보 험 사	650	3,298	3,948	1.4
투 신 사	50,529	168,359	218,888	76.9

주: CP는 7월 19일, 회사채는 6월말 현재 금액